

결제시장 존재감 '제로', 제로페이의 예견된 비극

1월 결제 8633건, 2억원 못미쳐
가맹점당 하루평균 4278원 결제
신용카드 승인 건수의 0.0006%

“소비자의 선택 유인이 핵심인데
시·중기부, 가맹점 확대만 집중”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시한 제로페이의 결제 실적은 사실상 '제로(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자유한국당 김중석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은행의 제로페이 결제실적 자료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출시한 제로페이의 올해 1월 전체 결제건수는 8633건, 결제금액은 2억원에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31일 기준 제로페이 등록 가맹점수는 4만6628개로 1월 한 달 동안 가맹점당 0.19건, 4278원이 결제된 셈이다.

또한 제로페이의 1월 결제건수 8633건은 지난해 월평균 신용(체크)카드 승인 건수 15억5000건의 0.0006%(100만건당 6건)에 불과한 수치로 결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도 시행 이후 1월까지의 결제금액인



2억2000여만원은 서울시(38억원)와 중기부(60억원)가 올해 잡아놓은 제로페이 홍보예산 98억원의 50분의1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제로페이는 정부가 카드시장에 개입해서 민간기업과 경쟁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며, 그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가맹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할 실익이 있는가, 신용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를 선택할 유인이 있는지가 핵심인데 서울시와 중기부는 가맹점 확대에만 목을 매고 있어 답답한 노릇”이라고 지적

〈월별 제로페이 결제 현황(시행일 2018.12.20)〉

은행명	2018년 12월		2019년 1월	
	결제건수	결제금액	결제건수	결제금액
국민은행	282	2,176,387	1,360	15,600,427
신한은행	354	6,078,825	1,807	27,189,885
우리은행	381	5,613,219	2,138	43,765,406
하나은행	30	243,632	122	2,303,575
SC은행	14	163,890	44	1,731,660
케이뱅크	62	471,824	492	87,981,003
경남은행	18	168,551	179	1,435,534
부산은행	14	195,500	324	5,449,820
대구은행	20	216,750	9	89,400
전북은행	7	21,360	51	379,010
광주은행	2	16,200	11	251,410
제주은행	-	-	-	-
수협은행	6	55,500	34	438,000
농협은행	94	3,130,455	568	6,441,642
기업은행	94	605,518	470	6,254,003
산업은행	-	-	24	182,710
합계	1,378	19,157,611	8,633	199,493,485

주1)정상결제 기준(당일 취소분 제외), 주2) 해당월 이용실적, 주3) 씨티은행, 카카오페이는 미참여. /자료=금융감독원

했다.

세금을 통해 제로페이의 실익이 역지로 늘어난다고 해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은행들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김 의원은 “결국 제로페이는 상인의 부담을 은행으로 돌리는 것뿐이고, 은행은 그 손해를 은행 고객에게 전가하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제로페이의 미래는 결코 밝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로페이에 대한 카드사의 입장도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결제시장에 개입해 시행하는 제로페이인 만큼 어떻게든 사업이 진행은 되겠지만, 카드의 무이자할부 서비스 등 혜택을 받던 소

비자들에게 제로페이가 얼마나 소구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 또한 “제로페이가 가맹점이나 소비자의 어필을 생각보다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서울시에서 제로페이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있고 문화시설 할인 등 관련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볼 여력은 있을 듯하다”면서도 “제로페이의 목적이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를 0%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인데 이미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도 연 매출 7억원의 가맹점까지는 무조건 0%, 10억원의 가맹점까지는 0%에 가까운 정도로 수수료가 감면된 상황이어서 사실상 제로페이의 수수료율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은 제로페이도 정부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미 신용카드 플랫폼이 국내에 잘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제로페이를 추가적으로 돈 들여 가면서 강행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차라리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결제인프라 혁신방안처럼 민간 페이사업자에게 길을 열어 준다면 민간 사업자들이 경쟁하면서 신용카드 사업자와 페이사업자가 각자의 인프라를 구축해 선순환적인 경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MB, 구속 349일 만에 조건부 석방

보석보증금 10억원, 자택 외출 제한
매주 화요일 시간별 활동내역 제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 기간 제약이 사라지면서 주요 증인 출석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새 재판부가 형성돼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까지 선고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리를 마치지 못한 항소심 구속기한까지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보석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수감된 지 349일만에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보석 보증금은 10억원으로, 주거지는 논현동 자택으로 외출이 제한된다. 접견은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의 가족과 변호인만 가능하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외부인 접견·통신도 할 수 없다. 그 밖의 인물을 만나기 위해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접견 이후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료에도 법원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시간별 활동내역을 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어길 경우, 보석이 취소돼 구금된다.

재판부는 형법상 피고인에 대한 무죄 추정 원칙과 지난달 15일 바뀐 새 재판부의 심리 기간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보석 이유 중 이 전 대통령의 건강과 고령 문제는 구치소 내 의료시설이 충분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고려해 보석 이유로 삼지 않았다.

법원은 검찰에 이 전 대통령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통해 외출 제한 조건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금 10억원을 수



강훈 변호사가 6일 서울고법에서 이 전 대통령 보석 결정이 난 뒤 기자들에게 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병종 기자

백만원짜리 보험증권으로 대신했다.

이날 구속정지로 ‘시간 제한’을 없앤 법원은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등 증인들이 계속 출석을 피할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예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 몇 분은 자신이 소환된 사실을 알면서 (폐문부재 등으로) 회피하는 상황이었다”며 “전직 대통령 사건의 중요성과 인지도를 볼 때,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당한 방법’의 하나로 서울고법 누리집에 증인으로 소환된 자의 이름과 신분 기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검찰에는 증인 소재 파악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7일 공판에서 “고려대 교우회장을 지낸 이 전 부회장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녔지만, 법원 소환장이 날아오자 폐문부재 송달불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그가 의도적으로 소환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역시 증인 선정 전까지 거의 매일 헬스클럽, 사우나에 다녔지만 일부러 출석을 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병종 기자 jaker@

치매보험 열풍?... 제2 치아보험 사태 우려

노인 10명 중 1명 꼴 ‘치매환자’
과거보다 진단금 10배 가량 많아
경증보상에 손해율 증가 등 우려

보험사들이 지난해 말부터 경쟁적으로 치매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중증치매만 보장했다면 최근에는 경증치매까지 보장 범위를 넓혔다.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할 것 없이 치매보험 출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상품 판매 중지 등 ‘제2의 치아보험’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판매 중인 치매보장 보험은 134개(특약포함) 중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보험은 82개, 중증치매와 경증치매도 보장하는 보험은 52개다. 이후 대형보험사, 중·소형보험사 구분 없이 치매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시된 경증치매도 보장 치매보험이 보험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보험사들이 우후죽순 상품을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현대해상이 출시한 치매보험은 보름 만에 약 1만1000명의 가입자를 모았고 메리츠

화재도 같은 달 치매보험 판매를 시작해 5일 만에 가입자가 5000명을 넘어섰다.

고령화 시대에 치매보장에 대한 수요가 높은 데다 진단금액이 과거 대비 많게는 10배가량 높아 가입자가 몰린 것이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인구는 2018년 75만명에서 2030년 137만명, 2040년 218만명, 2050년 303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국내 치매환자 수는 약 76만명으로 전체 노인 대비 유병률은 10.32%에 달한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환자인 점을 고려하면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경증치매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건망증 등 가벼운 치매 진단에도 1000만원~3000만원의 거액의 보험금을 준다. 치매환자 발생과 관련해 경험률 통계가 충분히 쌓이지 않는 상황에서 손해율 증가로 인한 판매 중지 등 ‘제2의 치아보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지난해 치아보험의 경우 과열 경쟁이 벌어지면서 과도한 시책, 보장한도 확장 등을 내걸었던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 중

단 또는 보장 축소에 나선 바 있다.

중증치매와 경증치매를 구분하는 기준은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와 장기요양등급에 따른다.

CDR척도란 치매관련 전문가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돼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장기요양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측정해 정도에 따라 1, 2, 3, 4,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1등급이 가장 정도가 심하다.

시장에서는 중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또는 CDR척도 3~5점, 경증치매는 장기요양등급 3~4등급 또는 CDR척도 1~2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아직 치매환자 발생 관련 통계가 축적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추이를 예측하기 힘들다”며 “지난해 상품 경쟁으로 인한 고위험 치매상품 개발, 손실 발생, 그리고 상품판매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주 기자 hj9@

세계 반도체 매출 7.2% 하락한 355억弗

美 반도체산업협회, 세달연속 하락세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올해 들어서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 1월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이 355억달러였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전달보다는 7.2%가 줄어들며 2018년 11월 이후 3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

년보다는 5.7% 적은 매출이다. 2016년 7월 이후 18개월만에 ‘연-연’ 실적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전년 대비 미국이 15.3%나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아시아·태평양(-3.8%)과 중국(-3.2%)과 일본(-1.5%) 등이었다. 유럽만 0.2% 상승했다.

전월 실적과 비교하면 미국(-13%)을 비롯해 중국(-8.5%), 일본(-4.7%), 아

시아·태평양(-3.6%) 등 모든 지역에서 추락했다. 이어서 SIA는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 조사를 인용해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4545억4700만 달러로 전년비 3% 감소로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SIA 존 뉴퍼 CEO는 “글로벌 반도체 매출은 2016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며 2019년에 슬로 스타트를 보이고 있다”면서 “주요 상품군과 지역에서 모두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김재용 기자 juk@